

민주 전략공천, 민평당과 선거연대 계기되나

광주 광산구, 전남 보성·해남·무안군 중심 거론 지방선거 이후 2기 내각출범때 연정으로 이어질 수도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 후보 전략공천이 광주 1곳, 전남은 3곳 등 최대 4곳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이면서 대상 지역을 놓고 지역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또 전략공천 당구 개정이 '선거 연대'로까지 이어지면서 지방선거 이후, 정치권의 지각변동이 가시화되지 않느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31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기초단체장 후보 전략공천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방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전략공천 적용대상에 대해 지구정장·시장·군수 선거 후보자 추천 시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로 적용 범위는 전국적으로 총 29개 선거구 이내로 하기로 했다. 해당 시도의 기초단체 수가 21개 이상이면 3곳, 11~20개면 2곳, 10개 이하면 1곳 이내라는 점에서 광주는 1곳, 전남은 3곳 정도가 예상된다.

전략공천 선거구는 시도당위원회와 협의해 결정된 뒤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전략공천 선정 지역 기준에 대해 백혜련 대변인은 "상대 당 후보에 대한 전략적 대응, 공천신청자가 없는 지역, 경쟁력이 약한 후보자의 단수 신청 지역, 전략적 고려가 필요한 지역, 심사와 경선과정에서 법률상 문제가 발생한 지역 등에 대한 대처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전략지역이 거론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광주에서는 광산구를 중심으로, 전남에서는 단장정 '유고' 지역인 보성·해남·무안군을 중심으로 전략공천이 언급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여성 후보자의 전략공천이 이뤄지

지 않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광주시장 후보 전략공천으로 후유증이 심각했고 시민 불신도 커진 만큼 이 지역에서 전략공천이 쉽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광주·전남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전략공천을 할당 식으로 배분하면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며 "지역 정치권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은 뒤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가칭)과 통합개혁신당 등 경쟁 상대가 있는 상황에서 삼불리 전략공천에 나설 경우 '오만'하다는 비판과 함께 거센 공천 후폭풍에 휘말리면서 지방선거 판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민주당의 전략공천이 뿌리와 성향이 같은 민주평화당과의 선거 연대를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호남은 물론 전국 차원의 선거 연대를 통해 호흡을 맞추고 지방선거 이후 2기 내각출범과 함께 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보수 중도 성향의 안철수-유승민의 통합 정당이 출범한다면 여권에서는 민주평화당과의 연대를 고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지방선거를 연대로 치르고 난다면 추후 연정 논의 과정도 부드럽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창준위 대변인은 "너무 앞시간 얘기지만 개혁 진영에서 한번 좁은 논의해볼 문제"라면서도 "당의 진용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아래) 원내대표가 지난 3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기 전 하얀 장미를 들고 성추행 피해를 목격한 서지현 검사를 응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형 사회 대타협기구 만들자”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대표연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난 31일 “모든 사회경제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만이 대한민국의 위기 해소를 위한 유일한 탈출구”라며 국회에 가칭 ‘사회적연대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한국형 사회적 대타협의 목표는 노동, 복지, 규제, 조세 등 정책 전반에 대해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존 노사정위원회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부족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빠져 있는 문제가 있다”면서 “사회적연대위원회는

장년, 여성, 비정규직, 비조직 노동자, 중소기업, 영세 소상공인 대표까지 포괄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여야가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부동산 불패 신화에 마침표를 찍고 주택이 투기가 아닌 주거의 대상으로 자리하도록 반드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정부·여당은 재건축 부담금을 포함해 보유세 인상과 분양위가 공개 등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면서 “경제적 약자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공적 주택 보급을 확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모티프도 재설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여야 개헌 당론 확정 ‘속도’

민주 4년 중임제 유력...한국당 이달말 목표 토론회 개최

개헌을 놓고 갑론을박하고 있는 여야 정치권이 당론 확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일 개헌 의원총회를 열어 개헌 당론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 의총에서는 그동안 당내에서 다수가 지지했던 4년 중임제가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그간 소속의원 전원을 상대로 개헌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했으며, 그 결과를 당론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헌법전문·총강,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직접 민주주의 강화, 경제·재정, 입법부, 사법부 등 6개 부문으로 나눠 설문조사를 했으며, 애초 지난 29일까지 분석작업까지 마칠 예정이었으나 다소 늦춰졌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지난 31일 “아직 수거가 안 된 설문지들이 있어 취합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권력구조 개편 문제와 선거제도 개혁은 서면 설문 조사를 하는 대신 원내 부대표단이 의원

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의견을 취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당론을 정한 적은 없으나 그동안 많은 의원이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2월말 당론 확정을 목표로 개헌안을 만드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먼저, 한국당은 설 연휴 이전 전문가 대토론회를, 또 설 연휴 이후 국민 대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다. 국민적인 지지를 받는 개헌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 수렴 작업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정당들은 이미 개헌 당론을 제시한 바 있으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분당과 통합 과정을 마친 뒤 개헌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정당이 이처럼 개헌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국회 논의가 진전을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 제 2당인 한국당이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 은 김민석 “정부 성과 낼 시점”

민주 경청투어... “비전 제시해야 시민이 지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민주연구원장은 지난 31일 광주를 찾아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광주에서 다수를 차지한다고 해서 승리가 아니다”며 “계속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한민국과 사회진보를 만들어내는 비전을 제시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센터 2층에서 민주당 광주 경청투어를 갖고 “광장에서 중앙권력을 바꿨고 새 대통령을 뽑았다”며 “지금도 당

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좋지만 시월을 지나 이제 국민은 구체적인 성과를 내라고 요구하고 있는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싶다”며 “그러나 광주에서는 또 다른 승리의 의미가 부여된다. 시장이 민주당 출신이고 계속 집권하고 사회변화가 지 쫓꾸는 승리를 하려면 시민들에게 가치를 지속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광록기자 kroh@

이개호 “박지원 대북특사로 보내자”

“남북 문제 경험·열정으로 획기적 전기 만들 것”

이개호(사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31일 민주평화당(가칭) 박지원 의원을 대북 특사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 주목되고 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광주일보와 만나 “남북 문제에 대해 박 전 대표가 쌓은 경험과 안목, 열정을 따를 분은 없다고 단언한다”며 “박 전 대표를 적절한 시기에 대북 특사로 보낸다면 남북 관계의 획기적 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 측이 박 전 대표에 갖고 있는 대화와 평화에 대한 신뢰는 상당하다고 알고 있다”며 “평양 올림픽 이후 남북 관계가 좋은 흐름과 전기를 맞는다면 박 전 대표의 대북 특사는 남북 모두에게 좋



은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남북 관계에 있어 박 전 대표는 정치권이 갖고 있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정치인은 생물이며 과감한 발상의 전환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권에서 적극적인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 관계자는 “여권 내부에서도 거론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평창올림픽 이후 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선제적 조치 등 적절한 계기가 우선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

한국당 전국 당협위원장 선정 완료

서울 4·전북 2곳 포함

자유한국당은 지난 31일 서울 4곳, 전북 2곳을 포함, 전국 24곳의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당협위원장)을 선정했다.

한국당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홍준표 대표 주재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조직강화특위가 마련한 당협위원장 선정안을 의결했다고 장제원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한국당은 전국 74곳의 당협위원장을 공모, 지난 19일 1차로 45곳의 당협위원장을 선정했고 이날 24곳의 당협위원장을 추가 발표했다.

이날 당협위원장이 확정된 지역은 경기도 10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 4곳, 인천·전북·경남 각 2곳, 대구·세종·경북·제주 각 1곳 등이다. 서울에서는 전국연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서초구갑), 영계 출신인 홍지만 전 국회의원(영등포구갑) 등이 선정됐다.현역 비례대표이자 홍 대표의 비서실장인 강효상 의원은 대구 달서구병 당협위원장으로 확정됐다.

한국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 공천률과 관련한 당헌당규 개정안도 의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강력 추천합니다. 010-3605-5000

※ 구례, 그랜드 호텔 매매 ※



-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11-1
- 지리산온천 정문 바로 앞, 최고위치
- 대지489평, 건물 768평, 대형객실 40개
- 지하1 지상4층, 엘리베이터 유
- 식당(300명 수용), 커피숍, 세미나실/사무실
- 연 매출 8~10억/순수익 4억정도
- 감정가 / 시세 - 20억 매매 - 13억

※ 나주, 2층주택(전원주택/별장) ※



-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383
- 대지106평, 건물42평
- 1/2층 - 각 방2 화1 거실
- 집마당까지 차량 진입
- 광주에서 40분
- 3월초 입주 가능
- 시세 - 1억 매매 - 7200만원